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흥관



지난달 23일 북측은 연평도를 포격했다. 이로 인해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부상자도 나왔다. 남측은 22일부터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었고, 북측은 이 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항의하는 전화통지문을 수차례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측의 의례적인 항의라고 생각해 무시하고 사격훈련을 했다고 한다. 휴전 이후 남북이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포격전을 벌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간인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 주민이 다치고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국민치고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김대형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오전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우리 측 대응과 관련, ‘상황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뭐였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겸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군통수권자가 확전을 두려워하니까 2~3배 대응 교전규칙이 있고 전투기까지

뒀는데도 자폭을 못 때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사태 발생 이후 확전과 관련한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항급하게 진화작업에 나섰고, 국방장관은 오후가 되자 “대통령이 확전을 막아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전쟁 불사가 진정한 용기인가?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고 바로 말을 바꿨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이 다시 도발한다면 전투기까지 동원해 폭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전면전 확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의 국가적 경제 사정이나 정치적 승계 등 내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군사평론가들은 도리어 내부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내부 갈등을 외

부로 돌리기 위해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연평도 포격도 3대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불풍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측은 자신들의 영해 내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될 경우, 무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한 ‘파괴적 후과’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평도와 대청도 등 해상 경계선 일대에서 포격훈련이 진행되었을 때 확전하여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김관진 장관은 확전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한다지만 그동안 국방장관과 국회의원

들은 천안함 폭파나 연평도 포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일까? 북측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아는 상식 아니었던가. 그런데 확전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판단만큼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또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확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가진 미사일을 북에 다 쏘고, 북이 가진 미사일을 남에 다 쏘면 누가 더 피해를 볼 것 같은가? 북은 산업시설도 낡고, 인구도 희박하여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지만 남은 산업시설도 많고, 인구도 밀집하여 훨

씬 피해가 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연평 사격훈련을 반드시 하겠다고 외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에 줄 것인가? 한국전쟁 때도 아무런 준비 없이 큰소리만 치다가 낙동강까지 밀렸지만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고귀한 생명이 사망하고, 그렇게 많은 피란민과 고아가 발생했지만 한국정부가 그들에게 보상해주었다는 말은 못 들었다.

죽음을 불사하는 군인정신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전쟁을 도발하고 확전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생명을 보호할 군인이 필요한 것이지만 군대의 자존심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와 평화를 송두리째 걸고 싸우는 군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시간에도 자식을 군에 보낸 힘없고 평범한 부모들은 행여나 전쟁이 벌어질까 노심조사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과 정치인들은 서정우 하사와 문광악 일병의 분향소에 조화를 보내기 전에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군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의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 칼럼

추태승



날이 갈수록 현대인의 잦은 스트레스와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탈모 환자가 부쩍 늘었다. 특히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남성 환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근래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남성들의 빈도가 늘어나고 10대의 중·고등학생들도 종종 문의를 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남자환자가 탈모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했지만 요즘은 여성탈모환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탈모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바른 섭생과 생활습관, 두피관리 및 치료 등으로 심해지는 것을 막는다면 좋

상이 될 수 있을까? 주된 시술 대상자는 이미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돼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 자신의 앞머리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술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발의 분포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식을 하는 방향과 밀도를 세심하게 고려해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시술의 효과는 진행된 탈모환자의 경우라면 어떠한 방식보다도 훌륭하다. 우선 옮겨심는 게 자신의 모발이어서

모발이식으로 탈모 걱정 던다

겠지만 한번 빠진 머리카락의 경우 다시 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이미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이라면 확실한 해결책으로 ‘자가모발이식술’을 선택을 해야하는 게 그 이유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문의를 받고 있는 모발이식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자가모발이식술이란 자신의 뒤쪽 머리카락을 앞으로 옮겨 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주된 이유는 남성호르몬,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모근이 영향을 받는다. 독특한 점은 우리가 뒤통수와 부르는 건위구의 모발은 상대적으로 빠지지 않고 긴 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뒤쪽 머리카락의 모근을 모내기를 해 옮겨 심듯 탈모가 진행된 앞머리 쪽으로 옮겨심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시술을 통해서 자신의 뒤쪽 머리카락의 모근을 탈모부위에 옮겨 심으면 새로운 건강한 모발이 자라나면서 걱정 없이 모발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탈모환자들이 모발이식술의 대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관리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라면 앞머리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 시술 후에 만족스러운 헤어라인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술 후 관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술이 국소마취로 진행되므로 출혈과 부기가 적고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증에 대해 심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라면 수면마취와 국소마취를 병행할 수도 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기간이 길지 않아서 수술 후 당일 바로 퇴원이 가능하며 일상으로 복귀도 빠르다. 옮겨 심은 머리카락의 모근이 생착하는 기간은 약 2주 정도가 걸리고 그동안 두피를 심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조심하면 된다. 그 후 옮겨 심은 머리카락은 일단 빠지기 시작해 다시 자라는 데 이때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뒤통수의 건강하고 굵은 머리카락으로 시술받은 사람에게 보다 자신감 있는 외모를 줄 것이다.

〈웰클리닉 대표원장〉

교사들 논술 능력 향상 위해 연수교육 활성화해야

고교 3학년여 올라가는 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요즘 ‘영수국’ 보다는 ‘영수논’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주요 대학 입시에서 논술시험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논술학원 강사를 불러들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도 있다. 수강료도 30~40만 원으로 일반 과목의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비싼 수강료가 부담과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논술이 공교육 현장을 무너트리면서 서민층 자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병폐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논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당장 광주뿐 아니라 전남·북 각 시군 교육청은 교사들을 위해 다양한 논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1동

기고

김영성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3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태어나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다. 이 단계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제대로 받아야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음은 스스로 독립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다.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아 사회를 유지시킨다. 아울러 늙은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자신을 낳고 돌봐주신 부모님께 보은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농경중심의 사회에서 생각하는 사회구성과 유리지의 기본 철학이다.

금은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농촌을 떠난 자녀가 다하지 못하는 봉양을 채워줄 무엇이 필요하다.

다행히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와 같은 농촌의 고령 농가를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의 고령농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연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농지연금은 창의적인 농어촌복지제도

그러나 전통 농업사회가 붕괴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위와 같은 사회구성체의 기본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이탈하게 되면서 농촌에는 노인들이 남아 농촌을 지키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어민 320만 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농어촌이 초고령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고령 농업인들이 아직도 생계를 위해 농사에 매달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73%가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규모 영세농이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78%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농촌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농촌지역 65세 이상 농가 중 46%가 4대 공적연금 및 금융권, 연금보험 등의 정기적인 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사실 이들 고령 농업인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군 역군들이었다. 곳곳하게 우리의 농촌을 지켜왔지만 지

농지를 담보로 맡긴 후에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농촌 현실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노후생활의 실질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지에 대한 전통적인 소유욕구와 ‘농지는 후손에게 상속시켜주어야 한다’는 관념은 극복의 대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자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연로한 부모를 충분히 봉양할 수 없다면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해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고령 농업인들도 스스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를 자신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 형태의 농지연금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모처럼 마련한 한국형 창의적인 농어촌복지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경영지원본부 이사〉

시설

BTL 사업 관리·감독 기능 강화 시급하다

광주시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설계와 다른 자재가 납품되고 신제품이 아닌 재생품을 자재로 사용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BTL은 광주시의 ‘2007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민자 1115억7700만 원이 투입돼 오는 2013년 완공 예정인 사업이다. 사업자는 이후 광주시로부터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 이자 등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결국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번 부실 시공 논란은 BTL의 성격상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납품업체 선정 등 공사의 모든 절차를 투자자인 시공업체가 진행하고 있어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감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준공검사가 나고 운영권이 사업자에게 돌아간 이후에도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광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은 문제가 있다. 우선 설계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자재를 재생품으로 대체한 것은 하수관거의 내구연한 단축 등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시의 대처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엄격한 관리 감독은 광주시의 기본적인 책무다. BTL이 아무리 민자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그 부담을 시민들이 지기 때문이다.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의 허술한 사후관리는 비난받을 마땅하다.

따라서 BTL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 보안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준공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운영자 계약 때 부실시공 및 운영부실에 따른 책임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BTL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 우롱한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광주시의회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온 유급보좌관제가 결국 무산됐다. 시의회 예결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3억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려 했으나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86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집행부 역시 의회가 추진하던 유급보좌관제에 제동을 걸어 ‘맞불’을 놓은 셈이다. 예산을 놓고 벌인 ‘가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의회가 집행부의 한심한 발상이 측은해 보인다.

집행부는 예결위에서 반드시 살려야 할 예산이었다면 정공법을 택했어야 옳다. 의원들을 만나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이 순리이지, 유급보좌관제를 발미로 거대하려다 성사되지 않자 ‘보복성’으로 맞선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시 관계자가 “과거 의회처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을 증액하면 집행부도 유급보좌관제 예산 증액에 동의

를 해줬을 텐데, 의회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아 양측이 실리를 잃었다”고 말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히려 윤봉근 시의회 의장이 “철저한 예산심사를 거쳐 낭비되려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지켰다”고 한 말에 집행부는 답변을 해야 한다.

분란을 초조한 시의회는 어떤 식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달 초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려다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사실상 철회했다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유급보좌관제를 꺼내 든 게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초선의원이 80% 이상을 차지한 6대 의회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갈등도 행부도 유급보좌관제 예산 증액에 동의

無等鼓

25만건의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을 전격 폭로한 ‘위키리크스(wikileaks)’ 때문에 각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이트 폐쇄, 계좌동결, 기부 금지, 설립자 체포 등 이런저런 압력을 가해 홈페이지(wikileaks.org)를 복사한 수백개의 미러 사이트가 인터넷에 생겨나고 있어서다. 네티즌들이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이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막으려 하면 더 퍼지는데’ 이른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7년 전 미국의 스타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캘리포니아 연안 전역을 찍은 사진 모음에 자신의 집도 들어있는 것을 보고 사생활 침해라며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피고소인은 인터넷에서 그 집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바브라는 사망 발명으로 이 사진을 퍼 나르는 네티즌들을 막지는 못했다.

무작정 덮으려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하다. 70~80년대 군부독재정권은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신문지상에 쓰지 못하게 했다가 오히려 ‘민주투사’로 각인시켜 훗날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일조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친이’ 쪽의 집요한 무시와 억압에도 더 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출판계에서는 이런 역설이 보다 확실하게 작용한다. 지난 2008년 국방부는 장하준 교수의 경제해설서 ‘나쁜 사마리아인’ 등 23권을 불온도서로 지정, 이들 책이 상당기간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게 했다.

어제 광주 5·18묘지에서 영면한 ‘실천적 지성’ 리영희 교수의 음에 자신의 집도 들어있는 것을 보고 사생활 침해라며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피고소인은 인터넷에서 그 집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바브라는 사망 발명으로 이 사진을 퍼 나르는 네티즌들을 막지는 못했다.

무작정 덮으려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申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른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